

자립생활 '굳히고', 장애여성 '살리고'
권리조약 제5차 특위 우리나라 맹활약
8월 미국 뉴욕서 제6차 특위 열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2-08 17:37:41

지난 1월 24일부터 10일간 정부대표 만이 발언할 수 있는 비정규회의(informal meeting)를 통해, 특별위원회는 워킹그룹의 초안을 기초로 7조(평등과 차별금지), 8조(생명의 권리), 9조(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10조(인간의 자유와 안전), 11조(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격하시키는 대우 혹은 처벌로부터의 자유), 12조(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3조(표현과 주장의 자유와 정보로의 접근), 14조(사생활, 가족, 가정에 대한 존중), 15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결함)에 대한 조문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14조와 15조의 일부까지는 조약초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자립생활 지지세 꾸준한 확대 확인

이번 5차 특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루하게 진행되어 긴박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었다. 엔지오의 발언이 거의 없는(1월 28일과 2월 3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엔지오의 특별발언만이 있었다) 정부대표만의 논의가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는 한편, 또 하나의 이유는 대개 조약의 전반부가 자유권에 관한 것으로 본질적이고 원칙적이고 법적인 범주에 있는 것들이라서 다소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민한 사항에서는 몇몇 국가들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지적 능력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권한(legal capacity), 특히 법적 권한의 행사(legal capacity to act)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손상(impairment)을 교정, 개선, 완화할 목적으로 강제개입이나 시설수용을 강요당하는 것을 보호해야한다”(11조 2항)라는 조항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한 시설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를 이유로는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 오랜 시간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대표인 이익섭 회장(한국DPI)은, “이러한 의견대립과 특별한 상황에 의한 이의제기는 자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들의 이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부담을 줄 사회권에 관련된 조항에 가서는 더욱 그 대립점이 첨예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협상에서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반대와 사족이 제기되면 조약의 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가 든다”라고 하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도 역시 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난산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의 활약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IDC(국제장애인단체간부회의) 아태지역 미팅에서, 아시아권 중 한국과 태국 정부대표 이외에는 다른 나라의 발언이 미약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한국대표의 활약은 돋보였다. 특히, 15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결함)에서 한국은 조항서문에 ‘자립적인 생활(living independently)’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향유’로 대치하는 제안을 해, 많은 나라의 지지와 함께 15조에서 자립생활의 정신이 논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익섭 대표는 “자립생활이 특정 모델을 연상시키며, 장애유형의 특성을 간과하고 통합형으로 장애인운동을 이끌어 간다는 거부감이 있어 최종적인 단계에서 또다시 반론에 부딪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꾸준히 지지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성조항 신설 꺼져가는 불씨 살려

별도의 여성조항을 만들기 위해 엔지오인 한국추진연대가 활약한 성과 또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여성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강한 반대의견과 회의적인 분위기로 한국정부대표단과 엔지오는 한 때 위기를 느꼈었다.

그러나 유엔한국대표부가 마련한 리셉션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국추진연대의 김광이, 김미연 초안위원은 유엔여성특별위원회 신혜수 위원의 지원을 받으며 엔지오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국제 엔지오 관계자들과의 끈질긴 접촉 끝에 2월 3일에는 장애여성을 주제로 한국이 주관하는 특별이벤트가 마련되었는데, 100여명에 이르는 각국대표와 엔지오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월드뱅크의 주디 휴먼, 세계농아인협회 리사 회장, 세계맹인연합의 키키 회장이 참여해 지지 연설을 함으로써, 장애여성조항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다. 이 모임에서 한국은 국제여성장애인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여 장애여성조항설치의 국제적인 연대들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IDC에서는 15조 부가조항(여성장애인)의 초안조정국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여성조항 마련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진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차츰 그 형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우선, 한국은 정부가 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한국정부의 참여는 본격적 이었다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였고,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있어 한국추진연대라는 엔지오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엔지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각 정부부처의 입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정부는 권리조약에 대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조항은 한국정부든 추진연대든 권리조약에 있어 최대한의 과제가 되었다. 제6차 회의에서는 15조 부가조항으로서 여성조항이 제일 먼저 다루어지게 된다. 장애인권리조약에서 특정집단을 별도로 모두 다룰 수 없다는 이유와 여성문제를 특정화시키지 말고 주류화(mainstreaming)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여성조항은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여성조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6차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그 기세는 다시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대응논리를 갖추고 특화된 여성조항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6차 특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는 국제엔지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따라서 엔지오의 활약 여부는 곧 조약의 수준을 좌우한다. 한국추진연대는 이 점을 중시하고 조약에 관한 국제엔지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전 세계가 고민해 온 장애인문제의 총집합체이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권리조약은 단순히 서명으로 끝날 국제조약이 아닌 한국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글=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동호 초안위원>

뉴욕/김동호 초안위원 (ablenews@ablenews.co.kr)